

AUTHOR 이상원

TITLE 개혁주의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

IN *개혁논총* Korea Reformed Journal (KReJ)
vol.8 (2008): 195-223

KRL 8(2008) 195-223

개혁주의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간 한미 FTA 곧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담론에서 치열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2004년에 체결된 한국-칠레 FTA가 한국의 농가에 끼칠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농민들의 적렬한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큼 크지 않았고,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는 주목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 대해서도 큰 반대가 없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유례없이 적렬한 친반노쟁을 촉발시켰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한 국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는 달리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세계 최강의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무성과 무역대표부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은 호혜적인 대등한 협상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 논쟁의 바탕에 걸려 있다. 게다가 미국은 남북분단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당시자요,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제국주의적 지배

에 종속된 식민지국가로 끌어 두려고 한다고 해석하는 한국의 진보진영이 한미FTA를 미제국주의의 음모의 한방편으로 해석함으로써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되었다. 결국 문제는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FTA 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이리든 더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해주는 호기(好期)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회를 미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전락시키는 악재(惡材)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하게 이 협정이 한국사회에 가져다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계산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FTA를 이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기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연계되면서 한층 더 치열해진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진영은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 적응할 것을 강조한다. 이 진영은 전세계 국가들의 절반 이상이 FTA 의를 안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FTA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잊고 세계교역무대에서 외롭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FTA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진영은 FTA 협상이 현재의 국내 유통시장보다 20배, 50배 이상 커진 “18억 명, 나아가서는 20억 명, 30억 명의 소비자군단”에 진입하는 기회 곧 무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한다.² 또한 FTA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쟁

심화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향상을 바로 경제발전을 가져” 온다는 낙관적인 기대³도 드러낸다.

다른 한편에서 진보주의자들은 한미FTA 반대운동을 단지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정착적 비판을 차운을 넘어서서 이 운동을 자신들이 구성하는 대안적 세계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자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관에 의거하여 한국사회를 자본세력과 노동자/농민/여성으로 구성된 피지배 세력으로 계층화한 후에 한미FTA는 자본세력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에 기대어 생존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서 노동자/농민/여성을 침취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한미FTA 반대운동은 구체적 경제정책으로서의 한미FTA 협상에 대한 단별적 반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포괄적인 대안적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⁴ 진보주의자들은 대안세계화의 강령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국가·자유·평등·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저항과 함께 경제적 교환보장, 노동권/여성권/식량주권의 보장, 각국의 특성화 사업, 문화, 경제적 매력을 반영하는 지역자산권, 펠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생명대양성·전통적인 농업지식의 보장 등을 제시한다.⁵ 진보주의자들이 대안세계화의 실현을 위한 투쟁전략의 한 예로 제시하는 것이 1994년에 있었던 베니코의 씨씨마스마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다.⁶ 진보주의자들은 맥시코의 경우를 미국과 체결한 FTA 때문에 경제가 파국에 이르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1. 예컨대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더 큰 수출시장을 열어 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표명한 문헌으로는 정인교, 노재봉 편저,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서울: 해남, 2005); 정인교 편,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서울: 해남, 2006); 이창우, 「무한시장 FTA」(서울: 다만북스, 2005); 김병주,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서울: 조윤Curriculum, 2006) 등을 들 수 있고, 한미FTA가 한국 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표명한 문헌으로는 사회진보연대 외,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서울: 사회운동,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서울: 메이네이, 2006);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대구: 녹색평론사, 2006);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막 선」(서울: 개마고원, 2006) 등이 있다.

3. 김병주,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67.

4. 정지영,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전략,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망”,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33;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55; 안성민,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FTA: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경쟁”, 129; 류주영, “한미FTA와 농업문제”, 156.

5.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48-49.

6. 류미경,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39.

제시한다.⁷

필자는 이 논문에서 먼저 세계경제무대에서 FTA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 이어서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배경과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대처 여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검토해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투자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한미FTA가 추진하고자 하는 협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내용이 미래의 한국경제사회에 가져올 득과 실에 대한 FTA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의 논리를 필자의 평가를 걸들여서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과 이 협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개혁주의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평가

7. 진보주의자들의 멕시코 경제현실에 대한 해석은 멕시코의 경제현실형성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역사적이고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원인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모든 원인을 미국과 체결한 FTA에로 훤힐사시키는 편향된 해석이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멕시코가 1994년에 체결한 NAFTA가 멕시코 경제위기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한미 FTA 국민보고서」[서울: 그린비, 2006])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이 제기되었다.(김진우, 「멕시코와 NAFTA」,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373-98) ① NAFTA 발표 이전 10년동안(1984-1993) 2.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NAFTA 체결 이후가 약간 성장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가 이르지 않았다. ② NAFTA 발표 이후 12년간 출출은 31배, 수입은 24배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개선되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수출비중은 NAFTA 이전과 이후 변함없이 80%선을 유지했으나 수입은 1991년 74%에서 2005년 53%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수자는 NAFTA 이후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었다. ③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나계수가 1990년대 중반에 52였다가 2000년에는 오히려 48로 감소했고, 빈곤율은 21.7%에서 20.3%으로 하락했고, 빈곤율도 37.1%에서 36.0%으로 감소함으로써 NAFTA 가 암금 및 소득의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과정된 것임이 드러났다. ④ 수입농산물 급증에 따른 농업생산감소, 농민실업증가, 이농, 수입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편익감소 등과 같은 멕시코 농업의 문제들을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계속된 농업정책 실패의 뉘적질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혁명 이후 멕시코는 대농정책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토지를 점거 또는 물수용 후에 농민들에게 재분배해 주었다. 토지는 소유권이 농민들에게 없어서 매각이 불가능했고, 토지 규모가 작아서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토지는 까우디요라고 불리우는 대지주에게 집중되었다.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농정관리들의 관료화와 부패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정직자금으로 전용되었다.

가할 것이다.

2 세계경제에서 FTA가 등장하게 된 배경

1930년 미국이 관세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자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라운드”를 연이어 개최했다. 1962년에 시작된 케네디 라운드, 1973년에 시작된 도쿄 라운드, 1993년에 끝난 우루과이 라운드 등이 개최되었다. GATT는 제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인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출범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보호관세를 폐지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일련관세는 남겨 두기로 하고 관세율은 2.8%선에서 국가재량으로 정하는 원칙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얻기 위하여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협상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부른다. 그러나 도하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들이 농업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함으로써 타결되지 못한 채 이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GATT에서부터 DDA까지 진행된 협상은 여러 나라가 함께 협상에 임하는 다자주의 협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다자주의 협상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타결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

단계 되었다. 그려자 세계각국은 GATT 제24조⁸에 의거하여 디자주의 보다는 협상타결이 순수로 "양자주의 자유무역협정" 곧 FTA(Free Trade Agreement)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 각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한 속도로 FTA가 체결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FTA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호주, CA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나카리과), 예멘, 오만, 모로코, 바레인, 도미니카 등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며,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스루(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안데안 국가들(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과 FTA를 체결했으며, 브루나이, 카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이미 ASEAN의 틀 안에서 FTA를 체결했고(AFTA), 인도는 ASEAN과 FTA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EU는 EU 국가들 안에서는 FTA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통합을 이미 실현시켰으며, EFTA(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스탁안, 아이슬란드), 알제리, 요르단, 페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EFTA는 EU 소속 25개 국가들은 물론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로코, 페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체결했다.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는 칠레, 미국,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나카리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EU, EFTA, 우루과이, 일본 등과,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과, 뉴질랜드

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다. 2005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300개 이상의 FTA가 체결된 상태이며, 이미 현재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간의 통제무역 시장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비율은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FTA 후발국으로서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세계시장으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국가경제의 70%를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자급도가 30% 밖에 안되고, 에너지 자급률이 5%를 밀돌면서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⁹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의식은 더욱 깊어진다. FTA를 체결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냉엄한 국제경제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현실을 고려에 넣지 않는 FTA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

3 한미 FTA의 등장과 이를 둘러싼 논쟁

FTA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는 오히려 먼저 협상카드를 내어 밀면서 협상에 앞장서자 격렬한 친반노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를 저지하는 진영은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을 미국이 다른 나라와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나라에게 내어 준다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한미 FTA 체결을 서두름으로써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특히 저가의 중국제품들이 미국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밀려 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한미 FTA라고 인식한다. 농업, 일부 시장점령장을 차지하는 것을 맹비하니 아니한다"(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19쪽)

8. GATT 제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제5항은 다음과 같이 FTA를 규정한다. "파라서 이 협정의 규칙은 제약 당사자 영토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협정을 체택하는 것을 맹비하니 아니한다"(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19쪽)

9. 이정우, "산업현장에서 보는 FTA," 72.

비스업, 자작재산권 등의 일부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는 관세가 철폐된 미국시장이 수출에 가져다 주는 이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수입총액이 수출 총액보다 늘어나긴 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해 오던 수입품목을 보다 싼 가격의 미국산 품목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총액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파악되었다.¹⁰ 뿐만 아니라 보다 선진화된 미국 경제로부터 한국의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기대되었다. 국제 경제적 관점에서도 한미 FTA는 한국과의 FTA 체질에 미온적이던 중국, 일본, EU 등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철폐해 줄 정도의 상품들이라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소·원해졌던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과 나아가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호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¹¹

한편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무기로 한국 경제를 한국 정부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사실상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음모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음모에 한국의 배제·총과 재벌이 결탁하여 한국의 노동자/농민/여성을 착취하는 도구가 곧 한미 FTA로 해석한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동아시아 경제의 폐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

국과의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미 FTA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균열을 일으켜 온 한미군사안보동맹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계기로 한미 FTA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¹²

4 각론에서 전개된 드실논쟁

이상과 같은 충론적 해석의 차이는 각론에 들어가서 한미 FTA 각 영역별로 한국 경제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이해득실에 대한 전망과 계산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이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면, 반대 진영에서는 예상되는 피해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기울인다. 경제활동이 미래에 가져올 득실 예상치는 자연과학에서처럼 실험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인적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인 한데 있어서 수많은 변수들이 잠복하고 있고 이 변수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결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예측치 추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른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이 가상현실에 불과한 완전 경쟁시장과 완전 고용 시장(= 전제 한 모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신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지만,¹³ 이 문제는 비단 CGE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이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예측수단들의 조사 결과를 절대화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미래 예측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

10. 최원묵, “FTA 득실, 경상수지·만파지지 말자,” 『동아일보』, 2007년 9월 28일자 A29면.

11. 이 입장은 반영하는 문헌으로는 이홍식, “한미 FTA 기대이익,” 53-70; 구혜우, “한미 FTA와 한반도 정체,” 399-416; 조정란, “한미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417-438를 보라.

12. 이혜영, “낯선 신민지, 한미 FTA,” 23-26-27-29-30; 안성민, “노동자들에 예고된 재앙, 한미 FTA: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경쟁,”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편(서울: 사회운동, 2006), 129.

의 국제 경제 현실 속에서 미국과의 FTA를 포함하여 FTA 협상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임을 전제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측수단들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여서 FTA 가가져 올 득실을 따져 보고 그와 같은 득실계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책임있는 윤리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비행기의 발명에는 필히 낙하산의 발명도 뒤따라야 하듯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진영은 반대하는 진영이 우려하는 정치·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미국의 FTA 협상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가 경제·외 구체적인 영역들에 깨칠 득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검토해 보자.

4.1 제조업¹⁴

한미 FTA 가 체결되어 미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에 미국의 제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제품과 같이 대미수출의 주력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높은 관세율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낮은 관세율 15을 고려할 때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수입증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관세율이 낮아도 수출물량이 많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총량적으로 보면 상당한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며,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섬유제품의 경우¹⁵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경쟁력

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제조업 부문에서 한미 FTA 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저가를 앞세운 중국제품들과 NAFTA 회원국들의 제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산 제품들이 빠른 속도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주로 한국의 초국적적인 재벌기업이 생산한 제품들로서 한미 FTA는 재벌의 이익만을 증대시켜 주고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어 재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를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침략하는 결과로 낙착될 것이며, 국가 전체를 경제전쟁으로 몰아 넣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¹⁷ 물론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라는 두 가치는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될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노직이 말하는 바 “야경국가”¹⁸의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비판되어야 하며 FTA가 이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 규제를 없애려는 시도로 나아간다면 이는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기업과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이원화된 구도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계급적 사회관은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한계의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근로자들과 이들에게 딸린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며, 재벌기업이 이들을 근로자로 고용할 때 재벌기업은 노동자의 생계를 해결해 주는 기관이 된다. 재벌기업이 노동자들과 이원화된 재벌들만의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터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4. 제조업과 관련하여 한미 FTA를 지지하는 글로는 박동철, “제조업”[한미FTA는 선식민지, 한미FTA], 64-78을 참고했다.

15.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평균관세는 7.9%, 미국의 평균관세는 2.7%, 전자제품의 경우에 한국의 평균관세는 5.0%, 미국의 평균관세는 1.6%이다(무역협회, “한미 FTA 산업별 영향”, 69).

16. 섬유제품의 한국의 평균관세는 9.7%, 미국 평균관세는 8.6%, 신발과 모자류는 한국의 평균관세는 10.2% 미국의 평균관세는 11.1%이다(무역협회, “한미 FTA 산업별 영향”),

17.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75-78.

18. 이 논점에 대해서는 이상원,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 자격이론,”『기독교윤리와 사회정의전개』, 신원희 편 (서울: 한글출판사, 2000), 76-85;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26-27를 보라.

4.2 서비스업¹⁹

서비스분야²⁰는 농업분야와 더불어 첨예하게 전면 논쟁이 가장 격렬히 전개되는 영역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몇 가지 통계수치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에 서비스수지는 매년 적자를 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매년 커져 왔다. 예컨대, 2000년에는 28억 5천만달러였던 적자총액이 2005년에는 130억 9천만달러로 커졌다.²¹ 이외는 대조적으론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매년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다. 예컨대, 200년에 741 억 4천만달러였던 흑자가 2005년에는 총액을 줄었지만 여전히 586억 3천만달러를 유지했다.²²

이처럼 양국의 경쟁력이 보여주는 큰 편차의 의미를 둘러싸고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사이에 해석이 대립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서비스산업에 속한 각 분야에서는 이미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거나 FTA 자체로도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부분은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FTA를 채결한다고 해서 추가로 짓아 올 피해가 문제가 될 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경제기 선

진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못한 채 질이 낮은 상태로 안주했기 때문이므로, 한미 FTA를 이용하여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의 서비스산업과 경쟁시켜서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산업이 쉽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데다가,²³ 아무리 선진화된 산업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경우 선진화된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²⁴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강력한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은 붕괴되고 한국은 조국적 서비스 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이 얻어 가는 이득은 제조업에서 잃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요,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밀지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의 각 분야별로 쟁점을 살펴보자.

금융에 있어서 미국은 미국금융기관도 내국인 대우와 외국인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각종 보험상품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것과 규제를 투명하게 해 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FTA를 통하여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초민족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의 히와 파트너로 편입되며,²⁶ 대내적으로는 해외 거래자본과 국내 자본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서울: 해남, 2006), 159-90; 김방철, “의료서비스와 약기산정,” 191-210; 조진희, “한미 FTA 교육개방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211-30; 신용식, “서비스분야,” 336-38; 반대하는 글로는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79-127; 박준형,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173-210; 송기호, “한미 FTA의 마지노선,” 101-103 등 을 참조했다.

20. 서비스분야는 제조업과 연계되는 제조업보조수단인 사업서비스(금융, 보험, 건설, 운수, 창고 등)와 소비자 후생을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교육, 의료, 보육, 문화, 관광, 농지 등)으로 구성된다.

21. 한국은행, “한국의 서비스수지(자자이),” 322.

22. BEA, “미국의 서비스수지 항목별 추이,” 327.

23. 한국의 교육한 음식문화라는 장벽 때문에 최근의 페스트푸드점들이 한국시장에 서 고전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4. 까르푸와 같은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E-Mart와 같은 한국토속유통업체에 의하여 밀려난 것이 좋은 예다.

25. 오정근, “금융서비스,” 171-72.

26. 박준형,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187.

27.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96.

내증소영세기업의 도전을 물고 올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²⁷ 특히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과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들이 민영화되어 국제 경쟁에 노출될 경우에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는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예컨대, 공적 연금 보험시장, 정책금융기관들,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들은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협상의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들은 한미 FTA 외 상관없이 이미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어서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더 악화될 것이 별로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은 투자자와 예금자 보호 등 금융 성과 진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협상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빈번한 자본유출입에 대해서 밀착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외화유동성 리스크 지도기준을 강화하는 등²⁸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불안정한 금융의 이동을 전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쟁점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의료보험시장의 전면적인 민영화가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붕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의료보험시장의 전면적인 민영화는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공공의료보험제도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료 보험시장의 개방은 국민보험의 근간을 벤정하는 대체형 개방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국민보험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특수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뜻하는 보충형 개방이므로 한미 FTA 가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보험제도는 이에 협상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일부 질병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장논리에 밀려질 경우에民間의료보험과 공공의료보험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마침내는 공공의료보험의 약화가 초래되어 가난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치환 의료보험의 영향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료보험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약값폭등에 대한 우려다. 약값 폭등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 제도는 가격대비 효율이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해 주는 포지티브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인데, 미국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나선데서부터 문제가 축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은 이 제도에 대한 반대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약값폭등의 우려는 미국이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연장과 이와 연관된 복사약(generic medicine) 사용에 대한 규제요청에도 기인한다. 새롭게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는 20년간 특허권이 허용되었다가 2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같은 성분의 약을 복사하여 생산판매함으로써 싼 값에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복사약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요청함으로써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꾸준한 협상을 필요로 부분이다.

교육부분에 미칠 한미 FTA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미 한국 교육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한국 학생의 미국 유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보험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특수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뜻하는 보충형 개방이므로 한미 FTA 가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교육의 미국에의 종속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는 지나친 과장으로 생각된다. 영화시장은 미국과 한국의 경쟁력이 뛰어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04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영화는 5,360만 달러 인데 비하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영화는 230만 달러로서 25배의 격차가 난

다.²⁹ 여기에 로얄티 송금액 4000만달러³⁰를 합하면 차치는 더 벌어진다. 동년 한국영화의 자국시장점유율은 60%인데 반하여 미국영화의 자국시장점유율은 94%이며,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5%인데 비하여 한국영화는 1.5%, 한국영화는 매년 70편씩 생산되지만,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2년 동안 상영할 수 있는 편수가 매년 생산된다.³¹ 그동안 한국영화계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스크린쿼터제를 통하여 이같은 악점을 보완하고 한국영화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산업분야 전면에 걸쳐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영화영역에서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시장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한류를 통해 아시아권에서 강력한 문화콘텐츠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세계 각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을 VCR, DVD, 인터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에 관람객들의 뉘우침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영화·아든 미국영화·아든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국내 영화들을 보호해 주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4.3 농업³²

한미FTA에 대하여 가장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핵심분야가 농업이

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국의 농축산물에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가격경쟁력을³³ 가진 미국의 농축산물이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싼 가격으로 밀려들어 올 경우에 한국의 농업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농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FTA 외는 상관없이 한국의 농촌은 도시기구의 소득의 증가에 훨씬 못미치는 농가소득의 증가,³⁴ 이로 인하여 누적되는 농가부채,³⁵ 가구단위 경작지의 규모가 작고 생활성도 낙후된 사정 때문에 농업에서 경제적 미래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의 대규모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때문에 교통을 뛰어 왔다. 더욱이 낮은 식량자급률은 농축산물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액으로 인하여 큰 폭의 수자적지폭을 보여 왔다.³⁶

그러나 한·칠레FTA가 터걸되기 직전에 이 협정이 타결되면 한국의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반대가 있었으나 협정 타결 후에도 별다른 증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미FTA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의 농업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은 편향되고 과장된 주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EU 소속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33. 가격경쟁력의 차이는 농축산물 전 품목에 걸쳐서 나타난다. 예컨대, 쌀은 5배, 육수수는 3배, 콩은 10배, 쇠고기는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120).

29. 문희관·공부, 「한미간 영화수출 현황」(2005),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120에서 재인용,

30. 문희관·공부, 「미5대 자회사로 알티 송금 예상액」, (2005);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4에서 재인용.

31.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123.

32. 농업의 영역에서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글로는 서진교, 「농업」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339-69,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막노선」, 15-31, 91-123;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183-202; 류주형, 「한미FTA와 농업문제」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133-57 등을 참조했다.

36.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총 수출이 19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92억 달러로서 7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을 보면 수출이 2억7천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25억 달러로 22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FTA, 186).

남미, 아프리카, 중국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온 각종 농산물들의 진열장을 방불케 한다. 각국에서 수입된 농축산물이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된 채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래도 수입 농축산물 때문에 네덜란드의 농축산업이 파국을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다. 네덜란드 자체의 농축산업은 흔들림이 없으며, 네덜란드도 많은 양의 농축산물을 수출한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한 해에 꽃수출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그러면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대상으로 등장한 농축산물의 가능성수입 현황을 검토해 보자.

4.3.1 국물류의 경우

쌀은 한국의 일반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WTO 규정에 따라서 중국, 미국, 대구, 호주로부터 2014년까지 의무수입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의무수입량을 국내에서 전량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쌀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한미 FTA에서 완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도 별 다른 변화는 없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물은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실제세율이 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옥수수는 900만톤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생산이 9만톤 뿐이므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수입관세는 무관세이므로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없다. 대두의 경우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량에 대한 관세는 1.5%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4.3.2 과일류의 경우

오렌지의 경우는 50%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감귤의 소비감소가 예상되지만, 감귤과 오렌지는 원조대체제가 아닌 부분대체제이므로 감귤소비가 오렌지소비로 전환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과의 경우에 45%의 관

세가 철폐되면 국내사과생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사과와 한국사과의 품종이 달라서 미국사과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과의 수요는 일정부분 유지될 것이다. 오히려 국산사과가 질좋은 사과로 대접받을 수도 있고,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한다면 국산사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포도의 경우에 이미 수입포도의 80%가 철폐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가 미국에서 수입되는데, 관세부과 이전의 미국산 포도가 한국산 포도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개방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3.3 축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관세부과없이 수입되면 한우사육에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쇠고기에 대한 한우 쇠고기의 차별화,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닭고기와 같은 백색육과 식물성 단백질의 대체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하여 시장에 내어 놓을 경우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국내공급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수입이 불가피하고, 이미 수입선이 유럽과 철레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가 한국농업을 파국으로 몰아 넣는다는 반대 진영의 주장은 상식적인 예측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해석이라는 느낌을 자울 수 없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는 것이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히 정책으로서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한국의 농산물을 전국적인 유기농재배를 보편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차별화시킨다면 수입 농산물과 동일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장거리 이동과 보관에 편리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농약과 장기보관을 위한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수입농산물과는 질에 있어서 차

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방법으로 농촌의 생태환경도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농가 보조금 지원정책은 농가의 경제적 상황을 근원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농경법을 지도해 주지 않고 악간의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농가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³⁷

4.4 투자와 투자자·국가재소권³⁸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투자가 FTA의 항목이 된 것은 관세철페를 통한 상품거래의 자유화라는 고유한 FTA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만 상품의 개념이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전

37. 농업 분야의 한미간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페 문제가 아니라 수입농산물이 국민의 건강에 끼칠 폐해에 관한 부분이다. 예컨대 미국산쇠고기의 문제는 100% 원천자연방목을 하는 뉴질랜드나 호주의 안전한 쇠고기와는 달리 인공적인 축산공장에서 인공사육을 통하여 생산된다는 점에 있다. 비위생적인 집단사육환경에서 부드러운 육질을 얻기 위하여 기름기 있는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이고, 철분을 먹이지 않고 나무상자에 기어들어 놓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성장호르몬과 항생제를 집중투여하는 방법으로 속성으로 성장시켜 도축해 보내는 미국산쇠고기는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물질이 된다는 점이 흥보되고 강조되어야 한다(이는 점에 대해서는 제레미 리포킨,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 [서울: 시공사, 2002]에 잘 나타나 있다). 또 한가지 미국의 농축산물 가운데는 유전자변형식품이 대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체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깨끗 부작용들(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와 환경에 끼칠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제레미 리포킨, 「바이오텍크시대」 전영택 역 [서울: 민음사, 1999]을 보라)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EU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문제를 반드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하며, 최악도 시판할 때 유전자변형식품인가의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양보조건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

38. 투자영역과 관련하여 한미 FTA를 찬성하는 문헌으로는 김관호, 「FTA 투자분야 이슈」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 (서울: 해남, 2006), 141-158가 있고, 반대하는 문헌으로는 이혜영, 「한미 FTA와 투자」, 128-71; 송기호, 「한미 FTA의 미치노선」, 39-90을 참조했다.

자무역을 통한 실시간 자본이동이 원활하여짐에 따라 FTA가 투자문제까지 다루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EU의 FTA 모델에서는 투자 항목이 들어있지 않지만 EU는 FTA의 성격이 집단경제협정의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FTA 협정국 간의 양자간 협정의 문제로 넘겨 두고 있을 뿐, 투자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투자협정은 이미 한일 경제협정이나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도 들어 있는 항목이다. 이미 한국은 해외투자에 대하여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해외투자는 국내 투자와는 달리 사업상의 위험과 정치적 위험에 직면한다.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페투자국의 정치적 인 변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험은 일정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페투자국 정부가 자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무력충돌이 일어나 투자자산이 손실되거나 해외송금이 제한당하거나 통화의 불ter환결정이 있을 경우 투자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제도적 장치가 이해의무금지규정(TRIM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과 투자자와 국가재소권으로 나타났다. 이 두 조치 가운데 특히 문제 가되는 것은 투자자와 국가재소권이다. 기존의 FTA에서는 페투자국의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의무를 천재했으나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FTA에서는 페투자국의 국내사법제도의 비선진성을 이유로 국제중재절차에 투자자가 페투자국을 바로 제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국가재소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절차에서 미국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국력과 임김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지체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라는 것이 한미 FTA 반대진영의 우려다. 실제로 미국은 국제중재건에서 8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 단 한건도 패소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섬세한 언어 표현이 중시되는 국제사법절차에서 언어문제도 뒤따른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

는 최대한 끈질긴 태도로 특자자 국가재소조항을 빼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중재회부에 동의권을 한국정부가 확보하든지,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중재회부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³⁹⁾의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심지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서까지도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반대진영의 우려에 대해서는 FTA의 풀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규제권 곧,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후생의 목적으로 해외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시켜거나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개혁주의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

지금까지 필자는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는 진영의 논증과 반대하는 진영의 논증을 소개하고 이어서 한미 FTA가 미례의 한·국 경제에 가져올 득실에 대한 양·진영의 주장을 구체적인 영역별로 비교적 소상하게 분석했다. 이제 이 분석결과에 대하여 개혁주의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첫째로, 한미 FTA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부는 기독교인인가의 여부를 제는 것대가 될 수 있으며, 또 보수적인 신학인가, 진보적인 신학인가를 제는 것대가 되는 것도 또한 아니며, 개혁주의 신학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학인가를 제는 것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또한 성경으로부터 한미 FTA라는 현대사회의 독특한 경제구조의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 나 반대로 딱 규정되는 구체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도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도덕적 강령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정치·경제·제도를 제

시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만 정치 및 경제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규범적인 지침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 FTA에 대하여 양비론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전지하는 것 보다는 동원이 가능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사회윤리적인 규범들을 찾아내어 그 빛안에서 구체적인 경제학적인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바추어 보고 보다 더 성경의 정신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보는 태도가훨씬 더 성실한 기독교사회윤리학자의 태도로 판단된다.

둘째로, 한미 FTA의 핵심은 국가간 무역의 자유화에 있다. 그러면 국가간 무역의 자유화에 대하여 개혁주의 사회윤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성경으로부터 무역의 자유화라는 현대경제의 현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혔동으로 만드사”라는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에 근거한 전가의 교리는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로 구성된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서 긴밀한 연대성 (solidarity)안에 있음을 시사하는데,⁴⁰⁾ 무역자유화는 이와 같은 인류연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칼빈의 교역관을 통하여 잘 정리되었다. 칼빈은 교역은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확보해 줌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간의 삶을 폐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사회의 각 자체들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과 인간들은 사회 안에서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시킴으로써 조회로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⁴¹⁾ 이같은 교역관은 국내교역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도 국제교역을 무시하고 자국내에서 자급자족적인 교역만으로는 국가경제유지를 물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업의 에너지원인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39. 송기호, 「한미FTA의 마치노선」, 88.

40. C. Smeenk, *Voor het sociale leven* (Rotterdam: Libertas, 1914), 208.

41. 앙드레 베일러, 「칼빈의 경제윤리」, 흥 카모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5), 92-93.

30%에도 못 미치는 자금률을 보이는 식량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교역이 중단되면 한국경제는 삼시간에 무너져 버린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으로써 전 세계 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협력하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하다. 더욱이 교통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의 전세계적 보급으로 인하여 실시간 교역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에서의 무역의 자유화는 피하기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셋째로, 한미 FTA에 대하여 평가할 때 빠뜨려서는 안될 논점은 과연 한미 FTA가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론에 관한 연구는 또 한 편의 논문을 요구하는 연구주제이므로 이 절론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하여 다른지 면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신학적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통한 공동체 통합의 실현” 곧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론임을 밝힌 바 있다.⁴²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논점을 둘러싸고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 FTA가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농업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농민들을 파멸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력한 반대는

거로 제시한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교육 시장의 개방은 국내의 영세한 교육기관을 도태시킬 것이며, 복사의 판매금지는 국민대중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며, 금융자본의 개방은 한국의 금융을 미국의 대국적 기업에 종속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피해는 한국의 노동자들에 게로 돌아온다는 것 등도 반대논거들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미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거나 과장된 것일 수 있다. 농산품의 경우에 초미의 쟁점으로 등장한 쌀은 한미 FTA에서 다루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이상을 한국이 이미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이 어차피 수입이 필요한 물품들일 뿐만 아니라 완전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적 대체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율이 한 국에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한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시장과 교육시장은 한미 FTA 체결이 아니라더라도 이미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한미 FTA로 더 개방될 것이 거의 없다. 물론 한미 FTA가 한국의 공공의료보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량 사육된 쇠고기나 유전자변형식품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가능성성이 열릴 수 있다는 판단, 해외 투자에는 금융불안이나 재소권의 위험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판단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FTA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상대국의 양보와 양허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를 미 국경제와 정치에 종속된 식민지로 몰락시킨다거나, 제2의 한일합방 또는 음 사업아라거나, 미국의 제51번 째 주로 전락시킨다는 주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부 자료에만 편향적으로 근거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주장은 논박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술 22:24; 신 10:19)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회정치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괴롭힘에서 본 한미FTA”, 「신학과 실천」 5(2007): 158-89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 속한 인사들의 글에만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42. 이 정의론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논거들로서는 ①백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웃었을 때 아흔이홉마리를 산에 그냥 둑 채 한마리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찾았는데 무리에 합류시킨 후에야 무리 전체를 움직이는 목지의 비유(마 16:26), ②발 밖에서 밖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 경제적 약자를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밭포동이들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내버려 두고 포도도 다파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고 하신 명령(레 19:9-10), ③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신 10:17-18; 시 46:6-9), ④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의 생활을 하게 하신 명령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다음을 22:1, 23:9, 신 10:19(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회정치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명령하신 내용(술 22:24; 신 10:19), ⑤ 사회구조의 가장 약한 단위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토지소유제도, ⑥ 빚진 체무자를 배려한 회면제도(례 25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성원, “사회통합을 위한 신학적 자원”, 「신학과 실천」 5(2007): 22-30.

43. 예컨대 기독교 경제윤리학자인 관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박득훈, “하나님 나라의 괴롭힘에서 본 한미FTA”, 「신학과 실천」 5(2007): 158-89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 속한 인사들의 글에만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는 많은 자료들을 누락시켜거나 외면하고 있다.⁴³

그런데 이처럼 한미 FTA가 한국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파멸로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미 FTA 협상이 한국보다 국력이 월등하게 강한 미국과의 협상이며, 따라서 이 협상에서 미국의 국력에 밀릴 수 밖에 없는 불평등협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본질적으로 불평등협상으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옵션은 지구촌화되는 현대세계와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가능한 옵션은 아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일부 남미국가들에서 같은 더 심각한 경제의 파국이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최대한 푸기를 벌휘하여 얻어낼 수 있는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가능한 한 불평등의 정도를 줄이면서 FTA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이익을 칠해하게 대변할 수 밖에 없는 미국 정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점고 한국의 국익을 배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협상테이블에서는 통할 수 없다. 국가간의 협상은 국력에 바탕을 둔 힘이 관철되는 곳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되⁴⁴ 국력이 약한 나라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 것이 강한 나라가 보여 주어야 하는 도덕적인 태도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제시하면서 벌어낼 수 있는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길이 가능한 차선의 길이다.

한미 FTA를 포함하여 FTA는 시장을 포함한 사회를 거의 제약이 없는 경쟁

체제에 노출시키는 협약이기 때문에 FTA가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

더라도 경쟁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계층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 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사회정의 가 위협받게 된다. 이와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로, 국가는 국민들의 공익에 치질된 국가간산업이 초국적 금융자본에 놓아나지 않도록 감독과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⁴⁵ 둘째로, 국가는 이 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재정적 지원에서 우 선적으로 확보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⁴⁶ 어떤 경제·사회적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생계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변화를 탄력있게 담아낼 수 있는 정신적이고 제도적 인 안전장치를 현법적인 수준에서 확보해 놓은 후에 온 국민이 삶의 질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FTA를 활용해야 한다.⁴⁷

마지막 넷째로, 개혁주의 사회윤리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념적 지향성을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이나 반대하는 진영 모두에게 나타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진영의 의식과 목표에는 국가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무한시장이라 는 이념이 암묵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이념이 글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들어가는 말”에서 적시한 바 있다. 이 이념

45.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금융자본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기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문헌이 잘 지적하고 있다. 이종태 편, *‘장하준? 정승일의 경제정의, 쾌도 난마한국경제’*(서울: 부키, 2007); 장하준, *‘국가의 역할’*(서울: 부키, 2006).

46. 이 논점은 성경적 정의론의 핵심이며, 이 논점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사회통합의 신학적 자원,” *‘신학과 실천’* 5(2007): 22-30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논점은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에서부터 시작하여 빙 히웃즈마르트에게 이르는 100년의 기독교사회사상의 결론이기도 하다. 사회철학자 존 롤즈의 일치된 결론이다.

47. EU에 소속된 각 나라들, EFTA에 소속된 나라들, 뉴질랜드, 호주 등은 강대국이 아울러 차별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살펴 한 것도 국가간의 관계가 절차하게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John Rawls, “The Laws of Peoples,” in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1993*, eds.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New York: Basic Books, 1993), 41-82.

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유토피아다. 국가의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에는 이성적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복 마진이 등장한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이 사회를 “지상의 암증가능한 지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일방은총의 수단이다.⁴⁸ FTA를 추구하되 국가의 규제의 고삐로부터 완전히 풀린 채 자본이 국가까지도 지배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FTA를 반대하는 진영의 이념적 지향성은 한층 더 강하다. 먼저 이 진영은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친성하는 진영을 지배계급으로 단정하고 반대하는 진영에 노동자/농민/여성을 포진시켜 피지배계급으로 분류한 후에 한미 FTA 문제를 두 계층간의 투쟁으로 해석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같은 급진적인 사회관에서는 현대사회와 억울적인 계층간의 유동성이 간파되고 있다. 또한 반대진영이 무장항거를 동원해 서라도 성취하고자 하는 “대안세계화”는 지배계급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만 피지배계급으로만 구성된 구조인 바, 이 구조는 현실 속에서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이다.

A Study o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Reformed Socio-Ethical Perspective

Lee, Sang-Won
Chongshin University

In the recent South Korean society have there been violent debates about the validity of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mp who stands for it argues that it will make South Korea's Export to the American market, the greatest market in the present world, much easier. However, the camp who opposes it argues that it will deteriorate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of peasants and workers and make South Korean economy dependent upon American economy financially. The pursuit to extend free trade among nations through FTA is valid, for it can suppor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an organic and harmonized world society. Especially the camp oppos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shows a serious error of ignoring deliberately the apparent economically positive facts which argue against their own argument. Minor problems in agriculture and medicine cannot be the sufficient reasons for refusing the FTA between the two nations, for major economic gains supercede minor problems. However, the FTA between the two nations must be allowed for on the two preconditions. One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be able to control the major industries which affect the public interests of people and the multi-national financial capital. The other i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Furthermore, the ideological direction of the two camps, i.e. the concept of infinite market of the camp standing for the FTA between the two nations and that of alternative globalization, must be refused.

4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1985), 27:12; Abraham Kuyper, *Soevereiniteit in eigen kring* (Kampen: Kok, 1930), 79:81; 이성원, “네덜란드 개혁주의 사회[경제]사상에 있어서의 경제정의론 II” 「신학자님」, 263호 (2000 여름), 130.